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농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김철수 의원, “군지역 주택도 군청 소재지에 집중 건설 읍면 지역 공급 물량 ‘전무’”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돼 낙상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이에 걸맞은 주택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도내 2만13,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됐지만 혁신도시 등 신도

시에 집중된 원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에 건설된 물량은 총 632세대로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미지도 군청 소재지에 주로 건설됐고 정읍, 김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은 낙후된 주택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정주여건과 의료 등 생활여건이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선 오늘날 농촌지역이 직면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 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멸위험지역의 복잡한 실태를 풀 실마리를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김철수 의원의 핵심 요지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고령층 주택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22.2%)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19.4%) 등 주거지원 정책수요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한다면 고령층의 지속적 거주가 가능함은 물론 도시 은퇴인구의 유입효과도 얻을 수 있어 초고령화시대에 소멸위기지역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수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금껏 소외돼왔던 농산어촌 위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저밀도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강영서 전북도 보건 의료과장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들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신고 방문판매업발 코로나19 확진 잇따라

도내 103~16번 확진자, 101번 확진자와 접촉 102번 확진자, 증상 이후 당구장 등 방문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7면>

미신고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전북 10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1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북 101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북 103번째 확진자부터 106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전북 103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과 5일, 8일 전주에 위치한 101번째 확진자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일에는 익산의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하고 이후 다시 14일 같은 곳을 찾은 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또 이날 지인들과 전북 원주군의 한 회사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도 참

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4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 B씨 역시 지난 8일 101번째 확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11일 본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지인을 만났으며 13일에는 지역의 한 마트도 찾았다.

이어 14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익산의 또 다른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5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가정 주부 50대 여성 C씨는 101번째 확진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B씨와 함께 지난 14일 익산의 다른 사무실을 방문하며 접촉자로 분류됐다.

106번째 확진자인 50대 여성 D씨는 지난 8일 101번째 확진자의 사무실을 찾았으며 이후 14일에는 104번째 확진자의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B·C씨와 함께 익산의 다른 사무실을 방문한 후 C씨와 같은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들은 모두 전북 101번째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익산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군산의료원에 입원 조치됐다. 보건당국은 이들 4명의 자택과 방문지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휴대전화,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추가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전북 102번째 확진자 A씨는 (60대 남성, 익산 거주·건설업)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 간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 역학조사 결과 A씨는 12일 오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 익산으로 돌아왔고 이날부터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

하지만 13일 오후에는 지인 5명과 동행해 당구장과 호프집을 찾았다.

14일 오후 익산시보건소에서 검체 검사가 실시됐고 15일 오후 7시 양성 판정을받았다.

A씨는 군산의료원 격리 병실에 입원 조치 됐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이병철 의원, “교육청 예산부담 초래... 도서관 사서 보조 채용 벤치마킹을”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이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문제에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7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12억1,000만원을 부담해 전년도 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의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적용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례로서 교육감에게는 3년 동안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해 전북 교육청이 올해 납부해야하는 고용부담금을 작년도 장애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공무원 부분에서 만 2분의 1 감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2억9,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공무원 부문 부담금인 12억6,000여만원을 추가하면 25억5,0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는 고스란히 전북교육청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는 그만

큼 줄어들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 조성은 요원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더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타 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 보조 채용을 전북교육청이 벤치마킹해 학교 사서 보조 채용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만큼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서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국내 대기업 최초 2조원 투자

새만금개발청, SK컨소시엄과 유니콘기업 육성 협력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6일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사업제안서의 현실성, 구체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SK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협상을 거쳐 오는 11월경 사업협약 및 사업지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광활한 용지와 일조 여건 등을 전라적으로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중물로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SK컨소시엄은 이번 공모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계획을 제안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산단 2공구에 공동체(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 및 지원공간 등을 구성, 총 3만3,000㎡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기간(20년에 누적 300여 개 기업을 유치

및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및 유치 기업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라이즈 군산 등 창업클러스터 운영 경험을 활용해 기업의 목표와 현황,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는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RE100 활용) 산단 5공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3高(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전력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데이터센터 4개 동을 2024년까지 1단계로 완공하며 2단계로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새만금에 첨단기업 유치를 장요소로 지적되어 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개선을 위해 해저케이블 및 광통신망 구축도 추진된다.

또한 SK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현대중공업, GM대우 철수도 체택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첨단 분야의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과 10년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1개 이상 탄생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전라감영 등 방문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의원)가 16일 ‘전라감영’ 및 완산구 동안산동 ‘완산벙커 1973’ 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이 오는 10월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전라감영서·남측부지 추가정비에 대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과거 군사시설에서 복합문화공간인 ‘완산벙커 1973’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완산구에 소재한 구 충무시립인완산벙커를 방문해 행정절차 이행상황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승섭 위원장은 “전라감영 등이 완공되면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라감영’과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주변 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섭 기자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고교 ‘한 곳도 없다’”

김희수 의원, “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부실’” 지적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교육위원장) 의원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은 빅데이

터,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이끄는 초연결 지능화 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주도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교’ 34개교를 선정·발표했

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과 세종만 선발된 학교가 없다.

교육부는 당초 사업공고에서 시,도교육청별 1개교 이상 운영을 권장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선발조건에 맞는 학교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도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올해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관련 사업은 노후 컴퓨터 교재뿐이었다”고 질타했다. /유호상 기자

“수도권 대학 지방 이전 유인할 국가 차원 정책 필요”

이병연 도의원, 지역거점대학 집중 투자 등 요구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유인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1)은 16일 제375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학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단

순한 교육의미를 넘어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을 이끌며 상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수도권 지역으로 학생 출현현상이 심화되고 설상가상 비수도권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로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독점하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져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 ▲혁신도시 특성과 부합하는 수도권 대학 내 단과대 지방 이전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정책 마련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이나 그 주변지역 이전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연 의원은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양성과 함께 현재 고등교육 분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대학의 역량 강화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